



제주도 민·관 협력 V2G 시범 모델 구축

제주도, 관용차량 대상 V2G 시범 사업 참여 전기차-전력망 연결해 배터리 전력 이용 기술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활용해 건물 전력망에 공급하는 기술이 제주도청 청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소속 업무용 차량을 활용해 V2G(Vehicle To Grid)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V2G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를 건물 내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도는 V2G기술을 통해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행 중 남은 전력을 공급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현대자동차·기아, 현대캐피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 업무용 차량 대상 V2G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는 V2G 솔루션 제공 및 운영 등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대캐피탈은 V2G 전용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도청 업무용 리스 차량을 V2G 차량으로 전환해 청사 전력과 연계하고, V2G 충전기를 통해 충·방전을 실시할 계획이



지난 7일 도청에서 열린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최승현(가운데) 제주도 행정부지사(왼쪽)와 현대자동차·기아, 현대캐피탈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다. 시범사업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V2G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사

업 후 기술 검증 등을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응을 위한 장치로 제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희기자

文 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남은 임기 국정운영 계획 발표... 청문회 논란 등 회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일정에 대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이긴 하지만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자기 대신 국면으로 돌입하는 만큼 이번 특별연설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에 대한 성과를 되짚는 데 방점을 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지난 4·7 재보

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다독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 연설에 이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북미 대화 재개 구상, 임혜숙·박준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일을 기념해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서지는 것은 지난 해 취임 3주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취임 1주년에는 사회관계장서비(SNS) 메시지로 소식을 전했고, 2주년 때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원도심권 내 어린이공원 재정비한다

1-2호 어린이공원 쉼터·체험공간 탈바꿈 사업비 2억5000만원 들여 녹지 등 조성

제주시는 원도심권 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삼도1동 505번지에 위치한 제1-2호 어린이공원 약 1600㎡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녹지공간 조성,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 등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공원 인근 중앙초등학교 학생 등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 및 치유공간으로서 공원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된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달부터 6월까지 재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공원 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놀이시설을 무장에 복합형 그네, 그물망늘

이, 짚라인 등 체험형 시설로 교체하고, 포장된 바닥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어린이들의 활동성과 주민들의 쉼터 기능을 강조하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원도심권 내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지인 제1-2호어린이공원은 지난 1976년 도시공원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김우남 마사회장 의혹 사실" 청와대, 농림부에 조치 지시

청와대가 김우남 마사회장의 측근 채용 검토 지시와 직원에 대한 폭언 의혹에 대한 검찰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상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김우남 마사회장과 전호관 문화비서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지시 결과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한국마사회장 본인을 비롯,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와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 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은 검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 결과를 농림부로 이첩함에 따라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한 농림부 차원의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호국원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되나 송재호 의원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올해 12월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제주 보훈단체들은 제주국립묘지 특수성을 감안해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나,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

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본래 현충원에 안장되므로 '제주호국원'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을 함당하게 예우한다고 할 수 없어, 현충원으로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송 의원은 올해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9개 보훈단체 모두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송 의원은 "제주국립묘지에 모든 유공자를 안장하는 만큼 현충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사계절 꽃으로 탐바꿈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토성과 도로변 주변이 사계절 꽃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가 도민과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탐방 명소가 될 수 있게 토성주변과 제주 울레 16코스 주변 도로변을 중심으로 사계절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에는 유채꽃밭과 4필지 정보리밭을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에 만개한 코스모스. 사진=제주도 제공

이끌었는데 오는 7월에는 해바라기 3만 분이 관광객 등을 맞을 예정이다. 또 8-9월 백일홍, 9-10월 코스모스가 꽃을 피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꽃피는 시기에 맞추어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군경의 반란진압이 국가 폭력인가?

문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해 유별난 집착을 보인다. 역사를 왜곡까지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고 한다. 작년 72주년 기념식에서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지지한 반란세력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찬사다. 금년 기념식에서는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현재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4.3의 본질을 공산무장 세력의 반란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개념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남로당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과 군경의 가족, 선거업무 관여자를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족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소수의견은 제주4.3사건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이다. 현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이다.

무고한 양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군경과 무장유격대의 충돌과정에서 희생당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허용될 수 없다. 이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자들을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인데 얼토당토않다. 그런데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제주4.3사건특별법은 당시 군법회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특별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으로는 재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니 특별재심으로 재심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직권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관련 사건 모두를 일괄해서 직권으로 재심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언급한 나머지 2,000여 명의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괄해서 재심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살인, 간첩 등을 범해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돈까지 주겠다는 것으로, 이럴 수는 없다. 4.3사건으로 내란죄나 간첩죄 등으로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징역 7년' 등 중형이 선고된 수형인들이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보상금으로 53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재심 사건은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두 건의 재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제주지방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관이다. 무죄가 내려진 판결에서는 검사가 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2021특별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배치.

2021 특별법은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특별재심, 직권재심'을 허용하면서 '무죄,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2001년 헌재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의무에 위배된다.

문 대통령의 2021년 제주4.3사건에 대한 추모사는 헌법위반이다. 작년 추모사는 아슬아슬했는데 금년 추모사의 '국가폭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이며, 헌법수호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화할 의무를 말한다. 추모사는 위 규정, 특히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책무'에 위배된다.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김학성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006037-04-00659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문의 02-737-0403